

아! 고하(古下) 송진우

“사람으로서 자유권이 없으면 우상이며 노예이다. (중략) 차라리 자유를 구하여 얻지 못하면 죽음을 구하여 얻을 것이다.

1932년 송진우는 잡지 『삼천리』에 “자유권과 생존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남겼다. 애초부터 자유는 사람의 근본이 되는 강령이고 자유 없는 곳에 행복이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거기에는 생존의 권리와 자유의 권리가 서로 부딪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들어 있었다. 정치적 생존권과 경제적 자유권이 나뉠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생존의 문제가 절실한 사람들도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고하가 존경하던, YMCA의 월남 이상재로부터 비롯된 사상이었다.

이러한 고하의 주장은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었고 빵을 얻기 위해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간도와 러시아로 건너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초기 한민당의 수석총무 시절, 영미식 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한민당에 유럽식 사회주의를 외치던 인물들이 적극 가세했던 이유였다.

해방이 되면서, 한국의 명제는 ‘독립국가의 건설’로 바뀌었다. 필연적으로 갈라진 남북 모두에게, 독립 국가의 이념, 운영 방식,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느냐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국가’가 중심 개념이 되면서 치열한 갈등과 대립이 전개되었다.

처음부터 한민당은 지주와 친일의 집단이라는 의도적 공격을 받았다. 박헌영 등은 한민당 주역들이 일제에 굴복했거나 협력했다며 물고 늘어졌다. 좌익계 신문들도 적극 가세하고 나섰다. 친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은 14%에 불과했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계보다도 적었음에도 그렇게 낙인찍으려 했다. 그렇지만 친일문제에 흠이 없던 송진우가 주도했기 때문에, 공세는 컸지만 국민들의 동조는 좌익계의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한민당은 영미식 민주주의를 주장했지만 미국식의, 일방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따르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경제에도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경제민주주의”와 “토지개혁”을 선포했던 것이다. “대자본, 대지주에 통제

정책을 써서 근로계급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으로 소작농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래야 유토피아를 외치며 공세를 퍼던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다. 한민당 내부에 지주 출신들이 적지 않았음도 그는 이 주장을 밀고 나갔다. 한국 보수 정치의 원류가 여기에 있었다.

1946년 7월, 미군정은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Type and Structure of a Future Korean Government)”를 주제로 서울 시민 8,47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응답자의 13%만 자본주의를 지지했고 8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공정한 경제 분배의 문제가 시대적 요청이었던 것이다. 송진우는 그것을 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12월 송진우가 정치 헤게모니를 잡으려던 집단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들에게 통일된 민족국가에 대한 주장은 있었지만 신생 독립국가의 이념과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송진우 이후 한민당의 초기 설립의 이념과 정체성은 변했고 구성원은 바뀌었다. 영미식 민주주의는 부르짖었지만, 더 이상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원세훈이나 김약수 등 사회주의자들이 한민당을 떠났던 이유이다. 함께 자유민주주의 아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송진우의 이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주와 친일의 집단이라는 좌익의 의도적 공격은 더욱 기승을 떨쳤고, 그들은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헌법에 와서 송진우의 “경제민주주의” 주장은 “따뜻한 보수”의 표현으로 다시 등장했고 1987년에 새로 개정된 헌법 119조 2항에도 새겨졌다. 그의 주장과 사상은 시대를 넘기 때문이다.

김명구 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 (2022.08.08.)